

◀산업지원부▶ NTT,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1천억원 투입

서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자금으로 1천억 원을 긴급 융자한다.

또한 자금 지원 폭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보증 1차 심사기준 중 일부 항목만 적용하고, 2차 심사는 면제하는 등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과다 채무보유 신용불량 업체나 사치향락 업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소규모 업체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대출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기존에 융자신청과 신용보증신청, 신용보증약정, 은행대출 약정, 서류보완 등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야 했던 것을 관할 구청 등에 한 번 접수하고,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신청시 제출하는 기본서류 종류도 3가지로 축소했고, 해당자만 2종을 더 추가하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도 은행과의 약정을 통해 최소한으로 조정했다.

이번 특별 융자는 보다 많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업체당 1천만원 이내로 한정되며, 대출금리는 서울시 특별자금 금리로 연리 4.0%, 5년의 장기자금으로 대출된다.

이번 특별자금 융자는 서울시 차치구별로 소재한 사업체 수를 감안해 자금을 구청에 각각 배분하고, 지역 실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각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대출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2월 28일부터 사업장을 관할하는 각 구청에 직접 접수하거나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각 구청별로 자금 범위에서 올 5월 10일까지 신청 받는다.

각 구청 담당부서는 지역경제과(또는 산업환경과, 환경산업과)이며, 접수에 관한 문의사항은 관할구청으로 하면 된다.

(자료 : 서울시, 2005. 2. 28)

◀서울특별시▶ 소기업, 소상공인 1천억원 특별융자

산업지원부가 자본재 시제품·첨단기술제품 등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부족 해소를 위해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개발자금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지원 대상 세부사업 및 규모는 자본재 시제품개발사업에 600억원,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에 300억원, 신기술 보급사업에 100억원이 지원되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융통성있게 집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고 정부의 재정자금 조기집행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지원자금을 상반기 중에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기계산업진흥회 등 6개 취급 기관들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고 추천 등 지원업무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산업자원부는 밝혔다.

올해는 낮은 시중금리로 인해 다소 축소된 지원규모를 효율성을 높여 보완할 예정으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과제가 지원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제 선정시 신청과제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탈락시키는 상대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중복과제 또는 문제사업 도출 대책으로, 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신청과제에 대해 산업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중복성 검토 등을 거친 후 추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신청횟수의 제한이 없어 객관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어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개선, 연간 융자금 신청횟수의 제한규정(과제별 심사 기회 2회로 제한)을 신설했다.

아울러 취급기관별로 상이한 응자추천서 양식을 통일해 취급은행 및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자금융자조건은, 상환기간 8년(3년거치 5년분할), 금리는 3.28%(올해 1분기)로 시중은행 금리에 따라 변동되며 대출가능금액은 소요자금의 80%이내, 50억원까지이다.

○ 문 의

- 산자부 산업기술기반과 이성천사무관 : 02-2110-5193, lsc6010@mocie.go.kr

(자료 : 산업자원부, 2005. 2. 1)

◀중소기업청▶ 해외고급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인력을 해외에서 찾아주고 1천만원 내외의 지원금도 지원하는 ‘해외고급기술인력 도입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전문지식을 보유한 고급기술인력을 러시아, 인도 등 국가별, 분야별 인력전문발굴기관을 통해 필요 중소기업에 알선해 줌으로써, 전문기술인력난 완화와 해외선진기술 도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단기(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및 장기간(1년 6개월이상) 활용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하여 기술개발의 영속성을 유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지원 내용은 체재비(계약 연봉의 30~40%, 6개월간, 1천만원 한도), 왕복항공료 전액이며, 지원 대상은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이다.

해외고급인력활용을 원하는 기업은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로 수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 문의

-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 : 042-481-4394, www.smba.go.kr 정책마당 → 인력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국제협력처 : 02-769-6844, www.sbc.or.kr → 공지사항

(자료 : 중소기업청, 2005. 2. 25)

◀중소기업청▶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제 실시

중소기업청은 창업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와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 등이 위험도가 크다는 이유로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혁신능력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전망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요액 중 정부의 창업정책자금 40%를 순수신용 방식으로 지원하고, 민간창투사는 투자자금을 60%비율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투·융자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창업을 통한 고용확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중소·벤처 창업자금을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대폭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투·융자 연계 지원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민간창업투자회사의 리스크가 완화되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혁신능력을 보유한 창업초기기업은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창업 촉진에 따른 일자리창출과 신규고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 중소기업청, 2005. 2. 18)

◀신용보증기금▶ 수출 설비투자기업에 5조 3천억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은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수출중소기업과 설비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는 등 총 5조 3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조치는 50% 이상 수출중소기업 및 잠재수출기업에 혜택을 부여하게 되며, 지원대상은 매출액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또는 수출비중이 50%에 미달되지만 향후 수출비중 확대가 예상되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또한, 중소기업청 선정 유망수출중소기업 및 대외유관기관 추천기업도 이번 특례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개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규모는 무역금융의 경우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작년 한 해 매출실적까지, 운전자금은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매출액의 2분의 1까지 지원된다.

자금 뉴스

이는 특례조치 이전의 보증한도가 무역금융이 매출액의 2분의 1까지이고, 운전자금이 4분의 1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보증한도는 두 배씩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수출기업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해 L/C(내국신용장 포함) 보유 등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향후 매출액을 추정하여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출주문 확보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크게 강화하기로 하였다.

시설자금에 대한 특례조치로는 영업점장 전결확대로 신속한 지원 및 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농·수협을 포함해 은행에서 시설자금대출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이다.

보증금액이 전액 담보인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일부 담보인 경우 30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증료 분납대상 기업을 총 보증금액 15억원 이상에서 시설자금보증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크게 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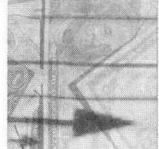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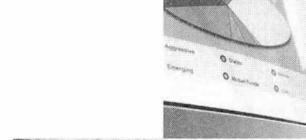
또한 심사방법을 대폭 완화해 기준에는 보증금액 10억원까지만 약식심사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30억원까지만 약식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채권은행에서 분담하고 있는 부분보증비율을 80%~85%에서 90%~100%로 높여 채권은행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은행들이 담보물의 가치하락 우려로 시설자금대출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 보증해지 관련 특약을 채권은행 및 시설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시설자금대출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

○ 문의

■신용보증부 과장 김홍수 : 고객센터 02-1588-6565)

(자료 : 신용보증기금, 2005. 1. 31)



자료제공 : 기업금융연구원 (www.fund.re.kr)